

國內景氣, 과연 安定基調인가

黃 義 珪

〈高麗大學校教授·經博〉

景氣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나 經濟의 운용대책에 대해 政府와 業界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당국이나 업계가 현실을 보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마치 눈먼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의 모습을 제각기 다르게 묘사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經濟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經濟的 要因뿐만 아니라 기타의 經濟外的 要因들을 포함하는 국내의 불확실성 변수들의 작용 때문에 정확을 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현실이 正常的인 軌道 위에서 安定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軌道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흔들리며 不安定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법이다.

經濟라는 운동체가 그 예정된 軌道 위를 달려가다가 진동이 심할 때 機關士格인 政府當局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는데 반하여 승무원과 승객들은 심상치 않게 불안을 느끼면서 기관사의 운전기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기야 經濟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파장을 이루면서 진행된다. 즉 上昇局面과 下降局面의 끊임없는 연속적인 파장곡선을 이루면서 시간과 더불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가 계속 하강국면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고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승이 있는 연후에 뒤따라 오는 자연스러운 하강현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면 지나친 낙관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경제는 지난해 下半年 이후 계속 바닥勢를 벗어나지 못한 장기 침체국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도에 景氣가 上半期中에는 다소 호황을 드러내다가 下半年에 들어와서 다소 침체하기 시작하자 정부당국은 경기가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正常狀態”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5년도 上半期中에는 回復될 것이라고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1/4 분기중 景氣가 여전히 싸늘한 冷氣를 나타내자 최근 정책당국자는 85년도의 경제는 그 前年度의 경제와는 반대로 前半期中에는 하강국면을 그리다가 下半年중에는 좋아질 것이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지난 5월 14일 KDI(韓國開發研究院)가 주최한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정부당국자들은 1/4 분기중 경기는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보나 경기침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동안 정부가 수출경쟁력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린 조치 등으로 2/4 분기 이후의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온 經濟安定化政策을 바꿀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와 업계 간의 景氣論爭의 배경과 安定化施策에 관한 입장들을 경제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經濟는 이미 84년 3/4분기부터 심상치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었다. 物價安定에 최우선권을 두어온 정책 당국의 획일적인 통화긴축정책으로 3/4 분기에 들어서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부도율이 높아지며 한편 수출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景氣不振의 赤信號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GNP 성장률을 보면 年平均으로는 7.6%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4분기 12.5%, 2/4분기 9.0% 이던 것이 3/4분기 5.6%, 4/4분기에는 5.1%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실물경제 성장의 부진추세는 지나친 통화긴축정책기조로 특히 지난해 下半期에 들어서면서 設備投資가 低調하였고 거기에 住宅建設을 비롯한 民間部門의 건설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海外景氣의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우리의 상품수출신장률이 급속히 둔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작년도 4/4분기에는 정부건설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의 감소폭이 두드러져 고정투자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고 민간소비도 크게 위축되었었다.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업계에 의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정부당국에게는 업계의 지나친 염사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정부가 우려했던 것은 경기의 침체가 아니라 금년초 국회의원 선거 때 풀려나오게 될 막대한 정치자금으로 인한 市中의 流動性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지도 모른다는 당면문제였다. 따라서 당국은 지난 해 4/4분기 이후 금년초까지 통화긴축정책의 고삐를 험껏 잡아 당겼던 것이다.

총통화(현금통화+예금통화+저축성예금)의 증가율은 84년도 前半期중에는 年率로 12.6%였던 것이 下半期에는 9.0%로 둔화되었었다. 총통화가 84년 1월부터 9월까지 年率로 11.1% 증가한데 비하여 84년 4/4분기와 85년 3월까지 6個月 동안 年率로 8.0% 밖에 증가하

지 않은 것만 보아도 지난 해 4/4분기 이후금년 초까지의 긴축정책의 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화긴축정책의 여파로 국내의 투자,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해외경기의 침체로 수출의 증가율이 둔화됨으로써 우리경제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계속해서 성장률이 둔화되어 금년 1/4분기 중에는 GNP 성장률 4.1%의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금년 1/4분기중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2% 증가율에서 5.3% 증가율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비롯하여 농업·어업, 총고정투자, 기계설비투자, 민간건설, 민간소비, 수출 등 각 부문에서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表-1) 참조).

이와 같은 部門別 경기의 침체에 더하여 外債元利金償還負擔이 지난해 3/4분기 이래 계속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경상수지 적자와 外債償還 때문에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아지는데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0.1%가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정부가 금년초의 경기국면을 안정적 호황국면이라고 분석해 왔던 것은 1/4분기중의 GNP의 낮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기



산업 및 수요별 GNP 성장추이

<表 - 1>

(1980년 불변가격기준 : 전년동기대비%)

	1984					1985
	1/4	2/4	3/4	4/4	年間	1/4
국민총생산	12.5	9.0	5.6	5.1	7.6	4.1
(국내총생산)	(12.3)	(8.9)	(6.7)	(5.5)	(7.9)	(4.2)
농림·어업	16.6	-4.1	-5.1	1.9	0.4	1.5
광공업	17.7	15.0	13.4	11.1	14.4	5.2
(제조업)	(18.2)	(16.0)	(13.6)	(11.2)	(14.6)	(5.3)
건설업	3.4	1.4	-0.6	-3.1	-0.1	1.1
전기, 가스, 수도 사업	13.5	9.8	10.0	8.0	10.2	7.0
서서비스업	9.7	8.4	4.6	5.5	7.0	3.7
국민총생산에 대한지출	12.5	9.0	5.6	5.1	7.6	4.1
총 소비	7.1	4.8	4.9	3.8	5.1	3.9
민간 소비	8.2	5.7	5.6	3.9	5.8	4.0
정부 소비	0.1	-1.0	-0.1	3.5	0.8	2.9
총 고정투자	13.3	9.3	3.7	-1.0	5.7	4.2
(기계설비)	(25.3)	(22.7)	(13.7)	(4.5)	(15.9)	(6.9)
총 수출	18.0	10.4	1.4	3.6	7.7	-1.1
(상품)	(23.0)	(11.7)	(2.6)	(5.8)	(9.9)	(-1.3)
총 수입	8.7	9.4	13.9	-1.0	7.4	-0.2
(상품)	(10.4)	(13.4)	(13.6)	(2.2)	(8.4)	(0.3)

資料 : 韓國銀行

선행지수의 움직임으로 보아도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3개월 후의 景氣動向을 예고해주는 先行指數(leading indicators)가 지난해 3/4분기 이후 줄곧 금년 들어서도 석달째 하향추세를 지속해 왔다.

금년 1월중에는 경기선행지수가 그 전월에 비해 0.1% 하락했고 2월에는 0.5% 그리고 다시 3월에는 0.7% 하락했었다. 先行指數를 구성하고 있는 指標중 1/4분기중 총유동성과 통화를 비롯한 제조업재고율 및 민간기계수주액 등은 다소 나아졌지만 수출을 비롯한 건축허가면적, 종합株價指數가 악화되었고 제조업의 평균 근로시간도 줄었다.

한편 3월중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약간 호조를 보였다고는 하나 아직 낙관할 수 없는 미흡

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景氣先行指數의 움직임으로 보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나 政府當局은 경기의 同行指數가 1월에 작년 12월보다 0.4% 하락한 후 2월과 3월에는 제조업의 생산, 출하, 가동률이 다소 호조를 보여 각각 前月比 0.1%씩 회복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는 아직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4월부터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늘어나고 있어 5월부터는 先行指數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수출경쟁력을 보강하고 設備投資를 촉진시킬 그동안에 취한 일련의 정책조치 등으로 경기는 늦어도 2/4분기 이후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정부당국은 그동안 對美換率도 이미 신속

적으로 上向조정되어 지난날의 原料의 高平價가 충분히 시정되었으며 수출금융의 달러당 용자단가 인상, 국산수출용 원자재가격인하, 수출설비자금의 확대, 3월 이후 총통화공급 증가율의 증대 등으로 景氣回復은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景氣가 염려할 만큼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安定圈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나 앞으로의 景氣展望이 밝다는 樂觀論은 우리의 不安과 우울한 기분을 해소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 좋다.

그러나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은 다같이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낙관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일시적 방편수단에서 나온 단순한 생각이거나 또는 當局의 可觀的 단기 정책효과에만 급급한 대책중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처럼 지나친 비관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방향으로 오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경제 현실이나 또는 정책의 결과는 반드시 예측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市中의 流動性的 증

가로 經濟全般의 資金事情이 좋아져서 景氣가 보다 活性化될 것이라는 展望도 모든 其他條件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流動性이나 총통화의 공급이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과 海外部門에서의 환수가 증대되거나 자금배분이 歪曲되어 있으면 효과가 상쇄되거나 그만큼 줄게된다. 마찬가지로 수출증대를 위한 支援措置 등을 취할 경우에도 對內外 다른 條件들이 이 정책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나라가 수출 촉진을 위한 대내정책들을 쓸 때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경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은 최근 수출부진현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서 분명해진다. 우리의 수출경쟁 대상국인 대만의 경우도 금년 3월의 輸出이 前年 同月에 비해 줄었고 日本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도 비슷한데 이는 西歐 先進國들의 景氣 특히 美國의 景氣後退로 미국의 輸入需要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인상 및 기타 수출촉진을 위한 대책을 쓴



다고 수출이 생각대로 증가되고 경기가 回復되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思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當局이나 업체는 적어도 지금의 경제현상이 景氣循環的인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경기의 둔화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인지를 철저히 진단해 봐야 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 해 下半年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 수출의 부진에 기인한 것이고 수출의 부진이 우리의 경쟁력의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수출이 對外 경제사정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금년도 수출목표의 하향조정이나 그에 따른 경제운용계획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년중 美國의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쳐 지난 해의 절반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의 금년도 수출신장목표 13%는 과욕일 수 있고 따라서 예상되는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수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國內景氣의 호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樂觀論일 수 있다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輸出과 함께 景氣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投資와 消費도 부진한 상태이다. 투자동향을 나타내는 건축허가면적은 1/4 분기중 작년동기 대비 10.9% 감소하였으며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건축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고 각종 不動産 및 土地去來에 대한 團東과 정책당국의 엄포 등도 景氣를 식제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이 작년같은 기간비 20.3% 줄었고 企業設備投資와 직결되는 公業용건축은 무려 24.7%나 격감했다.

그리고 生産活動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 소비가 작년 1/4 분기의 전년동기비 18.6% 증가에서 금년에는 2.3%로 둔화되었고 특히 산업용 電力 소비량이 지난 해 1/4 분기의 12.4% 증



가에서 금년 1/4 분기에는 2.2%로 떨어진 것이 생산 둔화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1/4 분기중의 낮은 GNP 성장률을 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출부진과 투자위축, 그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소비의 부진, 학생들과 사회불만계층의 연속적인 데모 등 景氣의 변수들이 하나같이 活性化를 상실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빈곤의 부산물로 등장한 不實企業, 不況産業 등 構造的인 문제가 한국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할 수 없는 국내정치판도와 사회계층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간의 잠재적 마찰도 景氣에 惡財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는 정책당국이 안정적 호황국면이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指數上으로나 현실적으로 좋은 편이라기보다는 어려운 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당국의 자(尺)로 측정하는 경기가 괜찮다는 인식 위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安定化施策基調를 변경시키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정책수단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安定化施策이 일관성 있는 政策基調로서 堅持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安定을 유지하는 정책인지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구명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物價安定만을 염두에 두고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安定化政策일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物價安定을 위한 통화긴축은 투자의 위축과 企業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경제에서 物價安定의 중요성은 결코看過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換率의 신축적 上向調整이나 金利의 리타 및 통화공급의 신축적 조정 등이 반드시 物價上昇으로만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海外需要가 부진하여 輸出이 잘 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輸出依存型 경제체제에서는 통화공급이 다소 증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物價를 上昇시키기보다는 오히려 需給의 균형관계를 유지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잘 관리되는 통화정책은 투자와 수요증대를 촉진하여 經濟構造를 개선시켜 安定基調의 교란 없이도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經濟與件이 흐르는 물과 같이 順理대로만 움직인다면 經濟는 自律과 競爭原理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세월 경제가 정책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歪曲되면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갑자기 自律에 위임하면 스스로 지탱할 힘이 부족하여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법이다. 그러나 經濟가 성장하고 市場機能이 제대로 作用하여 감에 따라 政策介入은 점차 축소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 우리 景氣가 몹시 나쁘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선택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自明하다. 자칫 景氣浮揚政策을 채택하면 效果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政策을 썼을 때 기대되는 效果가 費用보다 작다면 그 政策은 포기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事前的으로 期待效果의 평가가 진

적으로 정책당국의 主觀的 價値判斷 (value judgement)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어떤 政策의 期待費用과 期待效果가 최소한 同一하거나 後者가 더 크기만 하다면 그 정책은 채택되는 것이 확률적으로보아 유리하다. 모든 經濟政策은 그것이 당면한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인 이상 썩어지든 아니든 그만한 社會的 代價(費用)를 수반한다. 따라서 政策을 채택하는데 따르는 費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費用과 최소한 同一하기만 하다면 그 政策은 써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景氣가 沈滯局面에 놓여 있다고 진단될 때 通貨增加 정책이나 수출증대책 등과 같은 政策을 쓰는 社會的 費用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社會的 費用이 최소한 同一한 조건하에서는 그와 같은 政策은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景氣가 下降局面에 놓여 있고 企業이나 국민이 모두 景氣가 좋지 않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安定基調로 잘못 진단하는데 따르는 社會的 費用도 크려니와 또 진단이 바로 되었을 때 취해 볼 만한 정책조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政策을 安定基調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피하는 것도 유연한 정책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景氣가 좋지 않은 狀況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현실판단의 오류나 또는 시험해 볼 만한 政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것은 다같이 經濟의 安定基調의 유지라는 명목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安定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는 단기적인 현상이기를 바라지만 지난 몇개월 동안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聖經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잘 생각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있게 대처하면”(엡 5:15) 조만간 형통한 날을 보게 될 것으로 믿는다. ♣